

# 문턱 낮춘 디지털자산법... '원화 코인' 신뢰·인프라가 열쇠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가속  
빅테크 이어 카드·증권 진출  
시장 기대감에 관련주 강세

'통화 주권 훼손' 우려는 여전  
인프라·신뢰 확보 없인 한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결제 인프라 확보, 신뢰도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네이퍼페이(N pay)와 협업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한다. 대형 은행과 '빅테크' 기업에 이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도 참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통화 가치에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지난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포럼에 참여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공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ECB

80%를 넘겼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한 경쟁력이자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마쳤고,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지니어스 법'을 오는 9일 하원에서 심의한다. 지니어스 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미국 국제나 달러 현금을 담보로 준비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내 달러의 지배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근거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했던 정부도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다.

앞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막대한 자금과 신용을 동원 가능한 은행권과 대규모의 결제 인프라를 확보한 핀테크 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문턱을 낮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카드업, 증권업, 게임업까지 확산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속했던 가상자산업계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앞서 거래소들은 기존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한 발 물러나 시장 정착을 기다리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면서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구체적 법안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반을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 성공 위해 인프라·신뢰 확보해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연초 대비 수백 %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을 위한 과제도 여전하다. 주요 과제로는 스테이블 코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꼽힌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목표를 '통화 주권 수호'로 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해 금융 거래에 활용되기 시작한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막대한 유통량을 갖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프라도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원화 코인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초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5억~10억원의 자본금으로 제시했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문턱을 크게 낮춰, 기존 사업 진출이 유력했던 금융권 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대규모 진입이 예상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지만,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낮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행량과 동등한 규모의 원화 현금·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소규모 코인은 은행·대기업 주도 코인보다 부도나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나,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보다 달러·유로화 등 기축통화의 선호가 높아,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이 자본 유출을 오히려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사설 화폐가 유통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자본이동 통제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보다 통화정책이 받는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간편결제 전쟁... 핀테크·카드사, 새 시장 변화에 '촉각'

금융권, 상표권 출원 등 대비 강화  
카드사, 플랫폼 중심 타개책 모색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형성이 빨라지면서 핀테크사와 플랫폼사는 물론 은행과 카드사, 코인 거래소 등이 관련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편의성이 시장 선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상표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 카드사 중에선 신한카드가 최초로 상표권 출원에 나섰으며 토스도 상표 출원 대열에 합류했다. 앞서 두나무와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케이뱅크는 상표권 12건 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 등을 담보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결

제 수단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등장했다. 결국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우선 확대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형성 초기에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결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드사와 핀테크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직까진 핀테크사에 유리한 지형이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결제 규모는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실물카드의 사용률은 감소세를 기록하

면서다.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출시하더라도 핀테크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플랫폼을 필두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국 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실물카드를 제외한 모바일기기의 지급규모는 연간 5.5% 증가했다.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2.3% 감소했다. 전체 이용규모를 놓고 보더라도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 비중은 52.4%로 과반을 넘어섰다.

문제는 그동안 간편결제 시장 진출을 위한 카드업계의 자구책이 마땅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12월 카드업계는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페이(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를 공개했다. A카드사 앱에 B카드사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이다. 카드사 간 연합을 통해 핀테크사와 경쟁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전히 출시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연동에서 쓴맛을 본 카드업계는 이후 QR코드 통합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지난해 6월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면서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비씨·NH농협카드)은 결제를 위한 QR코드를 국제 표준인 'EMVCo'로 통일했다. 가맹점도 공동으로 모집했다.

그러나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중 핀테크기업의 비중은 연간 2.6%포인트(p) 확대된 70.3%를 기록했으며 카드사 이용 비중은 29.7%로 축소됐다. 카드사 간 QR코드 규격을 통합한 것을 두고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일각에선 카드사와 핀테크사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 시각도 있다. 카드



Chat GPT가 생성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 이미지.

업계는 금융결제 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핵심 요소인 만큼 카드사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업계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카드사 또한 자체 플랫폼 개발 속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업계 이슈로 부상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상용화한 시장의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STO 법제화 재시동... 증권사, 신사업 선점 '쟁걸음'

비상장·조각투자 제도권 진입 촉각  
2030년 STO 시장 14조5000억 전망

토론회(STO) 법제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들도 신사업 먹거리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증권사들의 준비 작업도

재개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STO 법제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STO의 제도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이 예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박창윤 지엘리서치 연구원은 "최근 신탄수익증권을 비롯한 조각투자 관련 법제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는 STO 제도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STO에 대한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TO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드문 영역"이라

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STO 대응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4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두로 움직였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부터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과 토론회 동맹을 맺고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자체 STO 메인넷 개발을 완료했다.

하나증권도 2023년부터 디지털사업본부 산하에 디지털자산팀을 꾸려 토론회 증권 등 디지털 자산을 전담으로 챙기고 있다. 같은 해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토론회 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NH투자증권도 'STO 비전 그룹'을 구성했으며, KB증권은 'ST 오너스' 협의체를, 키움증권은 페어스퀘어랩과 'STO 기술 인프라 공동 구축'에 들어갔다.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도 '월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